

세월호 언론 참사, ‘1막’과 ‘2막’에서 끝나야 한다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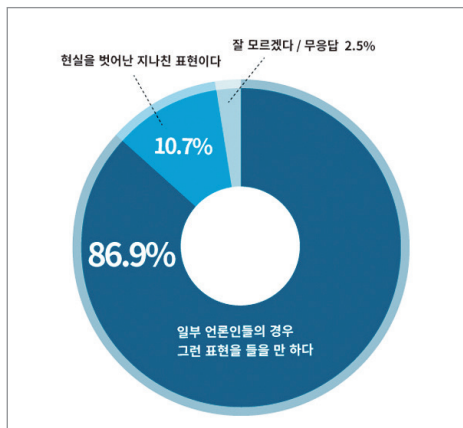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었다. 문제적 언론인을 통칭해 ‘기레기’라고 부른 일은 언론인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가리켜 ‘세월호 언론 참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기자를 쓰레기에 비유해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를 적지 않게 접했지만 기자 집단 전체를 가리켜 기레기라고 비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상

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 기자일수록 이런 지적을 더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5월 전국 언론사 평기자 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부 언론인들을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7%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답한 반면 무려 86.9%가 “일부 언론인들의 경우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하다.”고 답했다.¹⁾

1) 『미디어오늘』, 2015. 5. 19. 장슬기,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SBS·JTBC·YTN 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92>(검색일: 2015. 5. 20.)



미디어오늘 · 사회동향연구소 공동 조사 결과
(출처: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SBS · JTBC · YTN 순”, 2015년 5월 19일자)

실제로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현장 기자들이 반성문을 썼다. 개인적으로 반성문을 SNS에 올린 기자들도 있었고, 기수별 반성문을 낸 KBS 기자들처럼 집단적인 반성문을 공개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자체 연구 조직인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산하에 ‘재난보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세월호 관련 방송뉴스를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기자들 전체의 반성문인 셈이다.²⁾ 세월호 언론 참사의 원인으로 여러 측면을 지적했으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족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접근 태도의 부재였다. 언론보도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와 함께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에 근거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언론 참사는 이렇게 1막으

로 끝난 게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가 점차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빠져들 즈음 구원과 쪽에서 무더기로 언론조정을 신청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기자들을 통째로 ‘기레기’라고 부르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은 주로 희생자 유족이나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애타게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언론을 상대로 법절차를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벌인 것은 구원과 쪽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에만 구원과 측에서 수백 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1만 6천여 건의 조정신청을 냈다.³⁾ 최근 수년 동안 연간 조정신청 건수가 2천 2백~2천 4백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간다. 2015년 들어 추가로 제기된 것도 적지 않다. 조정신청 폭탄에 대응하느라 언론도 힘들었지만 이를 처리한 언론중재위원회도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어쨌든 구원과 측에서는 아무런 비용 부담도 없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해 언론을 압박했다.

언론 참사 2막의 시작은 세월호 참사 초기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반성문을 내놓았던 언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보인 점이었다. 언론은 세월호 참사 초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바

2)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위 재난보도 연구분과, 2014,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김동규, 2015, “언론조정을 통해 본 세월호 보도,” 『언론중재』 제35권 제1호, 6-17쪽.

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내 이 사건을 그렇고 그런 우리 사회의 갈등적 사건 중 하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사안의 본질을 파고들기보다는 표면적인 대립 구도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모든 관심이 유병언 일가 추적에 집중됐고,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미확인 정보들이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한 언론을 찾기는 쉽지 않았고, 이것이 무더기 조정신청의 발단이 됐다.

구원과 측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언론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건 처리를 맡았던 사람들은 다들 나름 성실하게 임했고, 상당한 분량의 조정신청은 적절하게 처리됐다. 하지만 언론조정 사건을 대하는 언론계 전반의 기본적 태도에는 아무런 발전과 반성이 없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쟁점이 된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잘못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같은 방식의 보도를 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언론 보도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정당한 보도 행위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조정 사례가 쌓이면 앞으로의 다른 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번처럼 여러 언론이 한꺼번에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일부 언론의 태도는 유사한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단순히 눈앞의 한 사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보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정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도가 항상 원칙과 기준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처리도 비슷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들 대부분 이런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고,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된 언론인들은 혹시 소송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손해배상 요구만 없다면 적당히 종결짓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유사한 사건들을 놓고 무더기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황은 좀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기레기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뭔가 새로운 모습을 약속한 상황이었던, 적어도 이번에는 각자의 보도 관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고치고, 반대로 앞으로 그런 보도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신청인과 언론중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

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언론보도에 필요한 사실 확인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사생활이나 초상권 보호의 범위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우리 사회와 언론은 세월호 언론 참사 2막에서도 별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소송의 불편을 피할 수 있다면 언론조정 과정에서 수백만 원 대의 손해배상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언론들도 있었다. 언론조정과 소송을 겪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자세가 없이는 언론보도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확립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언론에 이렇게 성숙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였을까.

어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핵심인 언론조정 과정에서는 이런 원칙적인 접근 대신 신속하게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언론 피해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각종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핵심적이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관 등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인격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피해구제도 중요한 일이지만 언론으로서의 무엇보다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수행하는 길이다. 평소 보도는 원칙 없이 하고,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앞세워 역시 무원칙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언론조정 폭탄을 불러온 것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 보도하고 심지어 다른 언론보도를 확인 없이 베껴 쓰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였다.⁴⁾ 이렇게 언론이 무차별적 보도를 하다 막상 언론조정 공세가 몰려올 때 사건 처리에 급급하다면 무엇으로 포장하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은 그 자체로 대단히 공익적이고 사회적 책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는 곳부터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언론 대신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다.

4) 『한겨레』, 2014. 12. 15. 황용석, “구원파와 언론중재신청 ‘폭탄’,” <http://multihani.hani.co.kr/arti/society/media/669186.html>(검색일: 2015. 5. 20.)